

내일부터 후보 등록... 조합장 선거 막오른다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마감 광주·전남 203곳 내달 12일까지 선거운동 입후보자만 600여명 예상...불법행위 여전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올해도 어김없이 금품제공 등 과열·혼탁 양상을 빚어지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자들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진행됐다.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오는 28일부터 선거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등 가족과 선거캠프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대상은 선거권을 지닌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공보와

백보·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 가능하다.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선거벽보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만 걸어야 한다.
명함의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 사무소 건물 안 등에서의 배포는 불가능하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지난해 12월20일까지, 조합 비상근직은 후보자 등록 하루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현직 조합장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만 직무가 정지된다.

광주에서는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8곳 조합장을 새로 뽑는데 60여명이 출마할 것으로 선거위는 예측했다.
전남에서는 농협 145곳, 수협 19곳, 산림조합 21곳 등 모두 185곳에서 선거를 치러 입후보 예상자는 540여명에 달한다.
유권자인 조합원 수는 광주 3만600여명, 전남 42만8천여명으로 모두 4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인 명부는 다음달 3일 확정된다.
위탁선거법상 현직에 유리한 구조 탓에 올해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돈선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일었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고발 5건, 경고 1건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전남

에서는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24건 등 처벌이 있었다.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의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4명에게 200만원의 준 혐의로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전국 첫 구속자라는 오명을 썼다.
각종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돈을 건넨 장면이 CCTV에 찍히거나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준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김현수기자 5151kh@srb.co.kr

한국당 황교안 60.1% 1위 리얼미터, 김진태·오세훈 순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가운데 황교안 후보가 당 지지층으로부터 60% 이상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0·23일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 전국 성인 남녀 71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3.7%p)한 결과, 황교안 후보가 60.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김진태 후보는 17.3%, 오세훈 후보는 15.4%를 각각 기록했다.
황 후보는 모든 지역·계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다.
한국당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대구·경북(TK) 68.1%, 부산·경남(PK) 6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7.1%)·30대(60.7%)에서 높았고,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7.3%)과 보수층(62.7%)에서 모두 선호도가 높았다.
김 후보는 충청(21.2%), 서울(18.9%), 경기·인천(17.8%), PK(16.6%)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20.3%)·20대(19%)·60대 이상(15.1%)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보수층(18.8%)·진보층(14.4%)에서도 오히려 우위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황교안 대세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황 후보가 계속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2위와 3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여서 27일 전당대회까지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뉴스

“5·18 정쟁 거래 대상 안된다”

지역 정치권 “손혜원·서영교 의원 입정장리 필요” 국회윤리특위, 28일 간사 회동 내달 전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보호하려다 ‘5·18 민주화운동’을 자유한국당과 벌이는 정쟁(政爭)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5·18 망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범·김순례 의원 정계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두 의원에 대한 입정 장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지난 18일 간사 회동을 갖고 한국당 세 의원의 정계안 처리 절차를 논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론을 못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계안 중 한국당 세 의원부터 처리하지는 의견이었고, 한국당은 회부된 안건 모두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은 한국당이 두 의원을 겨냥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고교 동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손 의원이 대통령 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한국당 전당대회 다음날인 오는 28일 간사 회동을 갖고, 다음달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정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한국당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계안 전체를 논의하지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한국당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세 의원의 정계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세 의원의 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두 의원을 버려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은 두 의원과 (다른 의원의 정계안을) 동시 처리하지는 주장을 할 것인데, 민주당이 이를 거절하면 세 의원의 정계안 처리는 들어갈 수 없다”며 “민주당이 두 의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두 의원을 보호하려다 5·18을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신속 처리를 위해 한국당 세 의원을 먼저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24일 본보와 통화에서 “서영교 의원은 범 위반 사실이 없고, 손혜원 의원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두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다분히 시간 끌기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5·18 모독 망인 규탄 범국민대회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이용성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시민 등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5·18 왜곡하면 최대 7년 징역”

여야 4당, 처벌법 발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오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특별법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가 추가됐다. 또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을 신설해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술,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은 “5·18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한국당 전대 현장투표율 1%대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현장투표율이 1%대를 기록하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국 235개 투표소에서 모바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 28만3천890명을 대상으로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날 낮 12시 기준 평균 1.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 투표율은 부산 2.15%, 대구 1.41%, 경북 2.20%, 경남 2.14%, 서울 1.67%, 인천 0.71%, 경기 1.18%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장투표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원명부에 등재된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5·26일에는 일반국민을 상대로 이틀간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전당대회 당일인 27일에는 일산 컨텍스에서 대의원 현장투표 및 개표결과가 발표된다. 뉴스

이트 plus

봄기운 불러오는 흥매화 활짝

광주 공예공원 매화동산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흥매화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이 흥매화를 배경삼아 추억을 남기는 등 이른 봄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오승환기자 dsoo@srb.co.kr

새로운 시시 모의는 문화25년, 구 15도원복원 예정 2·3·4, 6·7면 | 영화가 음악의 날방 - 보헤미안 8821 10-11면 | 1993년 영화의 여왕 18-19면 | 조영숙의 미술기 28-29면

기·획·연·재·물 | ① 김세경의 월드뮤직 - 보헤미안 랩소디 ② 인문지행의 세상읽기 - 헤라클레스를 보는 시각

www.mdart.co.kr

“문화 리더십으로 세계가 탐내는 도시로”

광주가 아시아문화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게 된다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이 광주에 손을 내밀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리는 미래 상이다. 이진식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한국 문화경제 모델의 가치가 광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가 주체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 연구결과물이 문화작품으로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식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원형 복원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한다. 이를 위해 본관과 별관, 민원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3월 중으로 대국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대의 아픔·현안, 작품으로 소통

예술과 문학작품은 시대의 표상이다. 광주·전남은 반식민과 남종화, 곁잡한 문민들을 배출해내며 한국 인문학의 원형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처의 위무와 예술화, 이를 통한 세계적 공감대를 꿈꾸는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전당 전시 앞둔 김생수 소장

힘들지만...수천년 이어온 전통 지키겠다

당양에서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만 목재 민속 유물 뿐만 아니라 전통 목가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생수(66) 소장. 14살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가구 등 목공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올해로 40년째 이조가구 제작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의 손꼽히는 명인이다.

구독료(1부) 2,000원 | 1년 정기구독료 50,000원 | 구독문의 062-606-7776 | 기사제보 062-606-7737 | 광고문의 062-606-7722